



2010 지방선거의 전국판세와 특징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2010년 5월 10 일

이내영 · 이현우 · 강원택
이곤수 · 서상민 · 정원철 · 정한울

제1부 패널조사로 본 6.2 선거여론의 특징__이내영 · 이현우 · 강원택 · 정한울

6.2 지방선거, MB정부 심판론 바람 불까?...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정외과)
심판투표(punishment voting) 보다 견제투표(balancing voting)에 주목해야

6.2 지방선거 최대 이슈현안, 팽팽한 균형...이현우(EAI 시민정치패널위원, 서강대 정외과)
차별화된 이슈전략으로 균형 깰까?

천안함 사건은 ‘북풍’?...강원택(EAI 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 정외과)
북풍의 쌍방향 효과, 여당에만 유리한 이슈 아니다

유권자 표심 어떻게 변화했나?...이내영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07년 대선패널조사 참여(625명), 2008년 총선패널조사 참여자(555명)의 태도변화

제2부 제1차 전국패널조사 기초분석__이곤수 · 서상민 · 정원철 · 정한울

1. 2010 지방선거, MB 정부 중간심판의 장될까?
중간심판론 확산요인과 억제요인 상쇄, 수도권 단일후보 파괴력이 유일한 변수

2. MB 심판론 왜 점화되지 않나?
정부견제심리 ↑ × 반정부 여론의 구심점 ↓ × 경제 악화 책임의 명확성 ↓ ≠ 심판론

3. 기타 변수 인터넷 매체 영향력 급증, 투표결정요인 세부분석



I. 패널조사로 본 6.2 지방선거 여론의 특징

6.2 지방선거, MB정부 심판론 바람 불까?

심판투표(punishment voting) 보다 견제투표(balancing voting)에 주목해야

이내영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장, 고려대)

역대 지방선거는 대체로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노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전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개에서 승리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55.2%를 기록하여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얻은 27.1%의 득표율을 크게 압도하였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MB정부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9%가 공감하고 있다. 반면 49.5%의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패널조사에서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이 4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7.2%로 이번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더라도 2006년 지방선거처럼 야당으로의 표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MB정권 심판론을 상쇄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47.8%의 지지율이 나타난 것처럼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도 2006년 선거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자유선진당 2.0%, 민주노동당 4.6%였다. 2006년 5월에 실시한 중앙일보 조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2.4%로 야당인 한나라당 39.2%에 크게 뒤졌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하에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구도 아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



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 이번 조사결과도 6.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4.8%,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지지를 모두 합쳐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변수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31.6%의 부동층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을 막는 다른 요인은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인해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한달 동안 언론의 관심이 천안함 사건의 처리와 진상규명에 집중되면서 세종시나 4대강 등의 쟁점들이 묻힌 것도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선거경쟁이 진행되는 점이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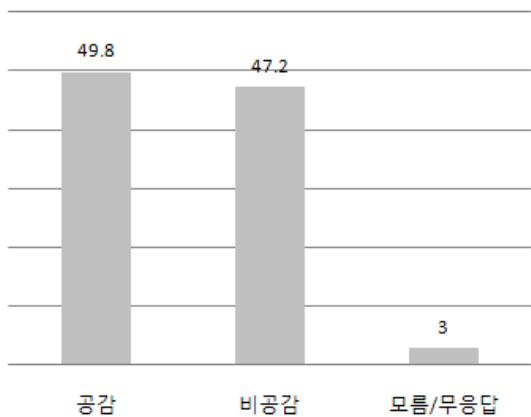
또한 투표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고, 국민들도 선거에 대해 냉담하다는 점도 정권 심판론의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와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63.0%에 불과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70.7%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야당으로서는 고민이다.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투표율이 높고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한나라당은 유리한 반면 투표율이 낮고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을 가진 민주당은 불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현 국면이 선거막판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임기 중반에 실시된 역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작용하여 정부여당이 고전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과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들의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음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5월 내내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들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바꾸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한나라당 우세국면이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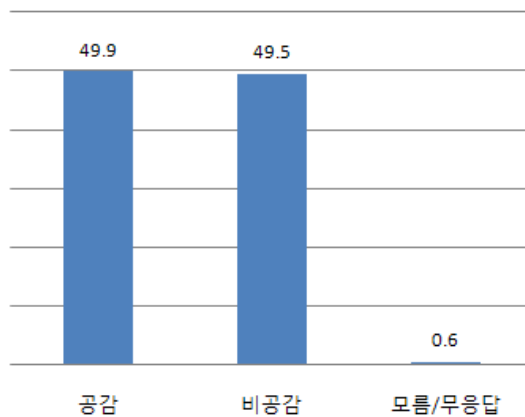


[그림1] 2006년 참여정부 심판론과 2010 MB 정부 심판론 지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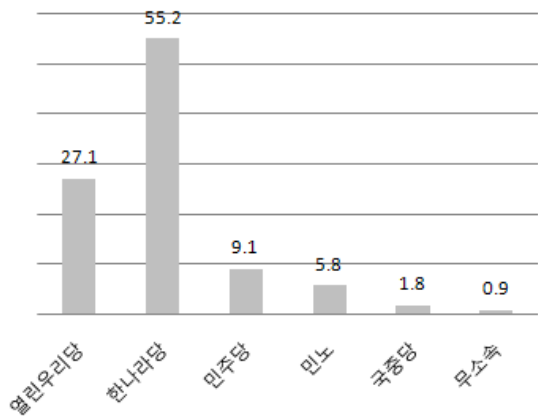
2006년 노정부 심판론 응답 (5.11~12, 1299명)



2010년 MB 정부 심판론 (5.4~6, 1,200명)



2006 선거결과 (광역단체장 전국득표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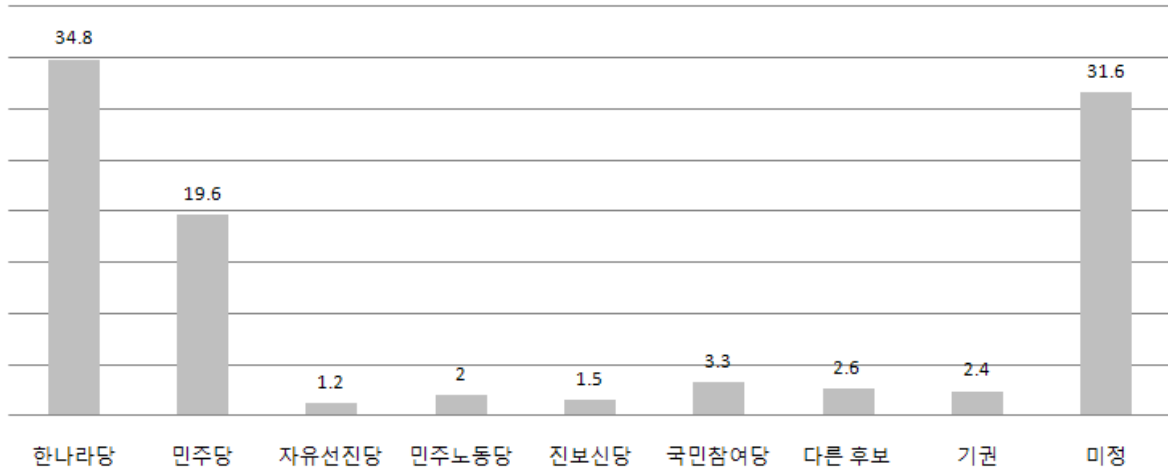
2010 선거결과

?

당선자 : 한 12, 열1, 민2, 무소속1



[그림2] 2010 광역단체장 어느 당 후보 찍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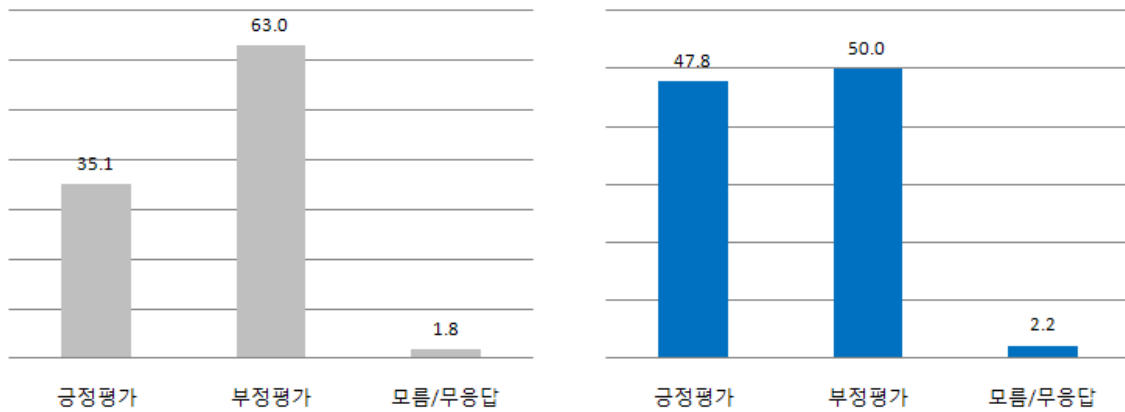


* : 모름/무응답 1.0%는 표기하지 않음 (n=1,200)

** 각 광역별 유력후보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당별로 취합함

[그림3] MB 정부 심판론의 억제 요인

2006년 노 전대통령 지지율 (5.11~12, 1299명)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4~6, 1,200명)



6.2 지방선거 최대 이슈현안, 팽팽한 균형 차별화된 이슈전략으로 균형 깰까?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정치성향이 강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정치현안들이 미치는 정도를 보면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8%가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태도를 투표결정에 고려하겠다는 답하였다. 다음으로 4대강 개발(63.3%), 세종시 이전(57.6%),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53.9%), 천안합사건(48.1%), 노전대통령 서거1주기(40.3%) 순이었다.

무상급식 이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논쟁핵심을 이해하기가 쉽고 정책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실시여부와 확대속도에 따라 수혜정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인 것이다. 이에 비해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 등은 중요하지만 정책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정치이념 성격의 사안이며, 노전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예정된 정치행사이며 아직 그 영향력을 명확히 평가할 수 없는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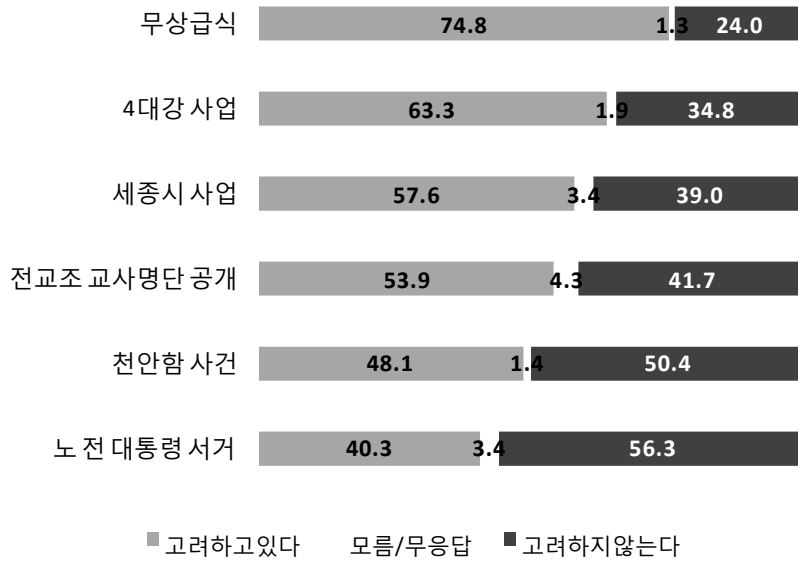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의 고려정도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찬반에 따라 광역단체장선거에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 중 57.8%가 투표결정에 크게 고려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17.5%)과 무상급식에 전면적으로 반대(10.3%)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이 이 이슈를 선거에 고려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무상급식 이슈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야당이 지지를 확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과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크게 고려하는 수준이 각각 42.3%와 43.7%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4대강 문제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자 집단을 강화하거나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선거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슈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6개의 이슈들 중 4개의 이슈에 대해 응답자들은 투표결정에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나머지 두 이슈들도 앞으로 정당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잠재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슈가 중요할 수 있다. 정당들은 아직 투표결정을 하지 않은 부동층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차별적으로 정책선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지집단과 부동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선거운동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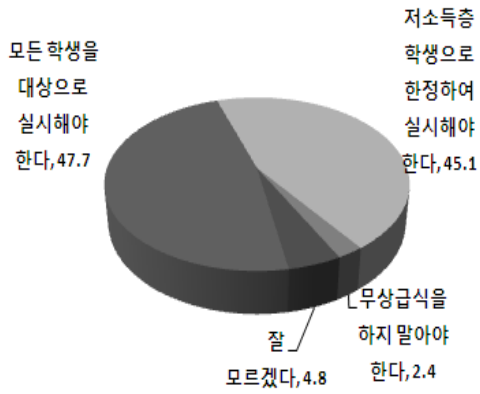
[그림1] 현안 이슈별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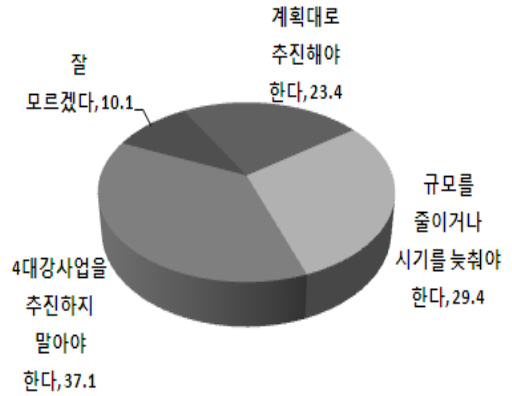
[보론]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그림2]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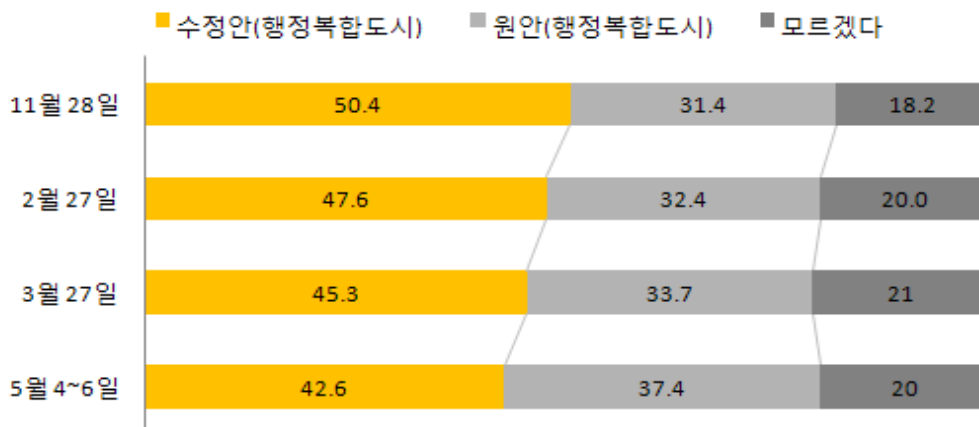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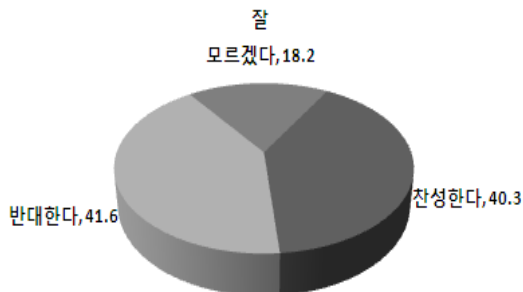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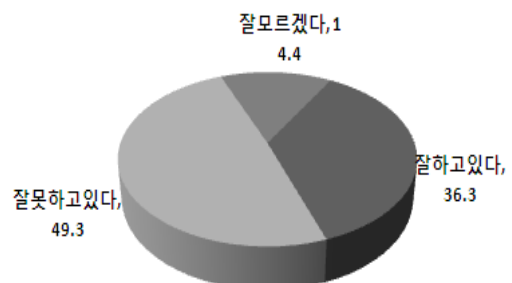
세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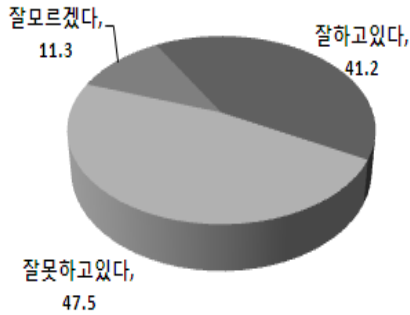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금지판결 후 한나라당 공개 강행



천안함에 대한 정부 대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7%와 45.1%의 백중세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론 또는 신중론이 높았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4%에 머무른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7.1% 그리고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에 대한 지지보다 5.2% 포인트 많았다. 원안 지지 37.4%, 수정한 지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교사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3%, 41.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의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49.3%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풍’?

북풍의 쌍방향 효과, 여당에만 유리한 이슈 아니다

강원택(송실대 정외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또 다시 이른바 ‘북풍’이라는 북한 변수가 집권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이 실제로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정파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형태로 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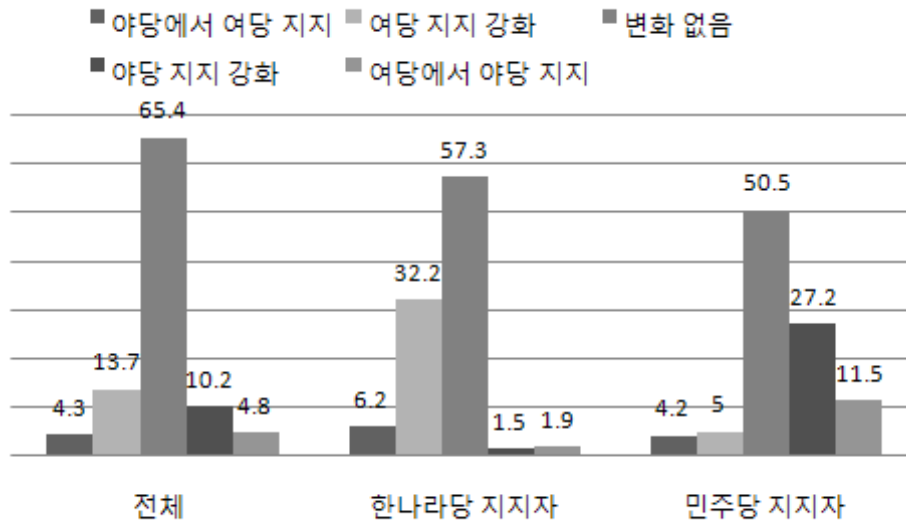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여야 간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18%의 응답자는 이전에는 ‘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4.3%)’거나 ‘이전보다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13.7%)’고 응답했다. 그러나 15.0%의 응답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섰거나(4.8%) 야당 지지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10.2%)고 응답했다. 여당 지지로의 변화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표본오차를 고려한다면 여야 간 지지 정당 변화의 비율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제로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고 한 응답자만을 두고 보면,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3%,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8%로 두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33%나 되는 응답자가 천안함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권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천안함 사건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동시에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의 38.4%(야당지지에서 여당지지로 선회 6.2%, 여당 지지를 강화 32.2%), 민주당 지지자의 38.7%(여당 지지에서 야당지지로 선회 11.5%, 야당 지지를 강화 27.2%)가 각각 자신의 지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천안함 사건이 여야에게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연령층은 50대, 60대로 여당 지지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이들 고연령 집단에서 높았다. 야당으로의 지지 변화는 2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에서 여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1]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유권자 표심 어떻게 변화했나?

2007년 대선패널조사 참여(625명), 2008년 총선패널조사 참여자(555명)의 태도변화

이내영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MB 대선투표자 지지층 75.6% MB 지지층으로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6.2 지방선거 盧風 불투명,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29.4%만 민주당 지지

패널조사방법은 동일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이번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1,20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 두차례 전국적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 대표성과 선거 경합도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충남 지역에서 각 600명씩 별도로 패널조사를 세 차례 실시한다. 전국과 5개 관심지역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중앙일보와 SBS를 통해 보도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차원의 1,200명 패널조사의 첫 번째 패널조사 결과로 전국적 차원의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적 차원의 지방선거 판세를 점검한다. 1,200명 응답패널 중 625명은 2007년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도 555명은 대선패널조사 및 2008년 총선패널조사에 동시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6.2지방선거 내에서의 태도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 시기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선거간 태도변화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선거간 패널조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이명박 투표자의 75.6%가 현재 MB지지층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지난 2007년 12월 20~21일에 실시한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한 625명 중 49.7%에 해당하는 311명이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득표한 비율인 48.7%에 거의 근접한 값으로 이번 패널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 이들 중 무려 75.6%에 해당하는 235명이 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했던 311명 중 23.8%에 해당하는 74명만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대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던 68명 중 절반 가까운 47.1%(32명)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52.9%만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



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138명(전체 625명의 22.1%, 실제 득표율은 26.1%) 중에서 79.7%에 해당하는 110명은 여전히 이 대통령에 비판적이고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된 응답자는 19.6%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 고공행진의 비밀은 2007년 과반수 지지에 육박했던 지지자들의 결집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적 유권자들의 다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한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17대 대선투표자의 2010년 MB 국정평가 변화

17대 대선투표 (2007.12. 20~21조사)		2010년 국정지지(2010.5.4~6 조사)		
이명박 311명(49.7%)	→	235명	지지	75.6%
	→	74명	반대	23.8%
	→	2명	모름	0.6%
정동영 138명(22.1%)	→	27명	지지	19.6%
	→	110명	반대	79.7%
	→	1명	모름	0.7%
이회창 68명(10.8%)	→	32명	지지	47.1%
	→	36명	반대	52.9%
기타 108명(17.3%)	→	20명	지지	18.5%
	→	86명	반대	79.6%
	→	2명	모름	1.9%
총 625명(100%)	→	314명	지지	50.2%
	→	306명	반대	49%
	→	5명	모름	0.8%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격차, 지지층 결집도의 차이에서 비롯

2008년 총선 한나라당 후보 투표자의 64.6%가 한나라당 지지 결속 통합민주당 지지자의 47.4%만 현재 민주당 지지, 절반 이상은 이탈

한편 지난 총선패널조사에도 참여했던 555명만을 따로 분석해보면 2008년 4월 총선에서의 투표성향과 현재의 정당지지 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체 555명 중 43.2%(실제 득표율 37.5%)에 해당하는 240명으로 이중 64.6%에 해당하는 155명이 현재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135명(555명의 24.3%, 실제 득표율 25.2%)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47.4%(64명)만이 현재에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 135명의 14.1%는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반면,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7.5%만이 현재 민주당 지지로 이탈했다. 즉 한나라당 지지층은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 열 명 중 여섯 이상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남아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높은 결집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상대당으로 이탈한 규모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컸다.

[그림2]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

18대 총선투표 (2008.4.10~12조사)		2010년 국정지지(2010.5.4~6 조사)	
통합민주당 지지 135명(24.3%)	→	19명	한나라 지지 14.1%
	→	64명	민주당 지지 47.4 %
	→	27명	무당파 20.0%
	→	25명	기타 정당 지지 18.5%
한나라당 후보 240명(43.2%)	→	155명	한나라당 지지 64.6%
	→	18명	민주당지지 7.5%
	→	55명	무당파 22.9%
	→	12명	기타 정당 지지 5.0%
기타 180명(32.4%)	→	46명	한나라당 지지 25.6%
	→	24명	민주당지지 13.3%
	→	75명	무당파 41.7%
	→	35명	기타 정당 지지 19.4%
	→	220명	한나라당 지지 39.6%
총 555명(100%)	→	106명	민주당 지지 19.1%
	→	157명	무당파 28.3%
	→	72명	기타 정당 지지 13.0%

6.2 지방선거 盧風, 지지층 결집보다 이탈층의 복귀 효과 커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153명)의 29.4%(45명)만 민주당 지지

2007년 노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응답층(472명)의 15.7%(74명)는 민주당 회귀

이번 선거에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계기로 내심 노 전대통령 추모 열기를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전략은 현실화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패널조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현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이번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625명 중 24.5%에 해당하는 153명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확산되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힌 핵심 지지층이었다.

이들 중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4%에 불과한 45명이었다. 친노정당을 표방한 국민참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9.2%에 불과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 1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층이라고 답한 당시 친노 지지자가 3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이었던 응답자 472명 중 절반 가까운 47.9%(226명)이 현재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로 복귀한 응답층은 15.7%(74명)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당 지지는 1.3%(6명), 기타정당 지지 8.7%(41명)이다. 현



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26.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당시 노 지지층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로 결집한 규모(45명)보다 노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층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응답자 규모(74명)가 크다는 점이다. 당시 노대통령의 핵심지지층 중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에 오히려 기대가 크지 않고 지지가 분산되고 있는 반면, 당시 비판적이었던 층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지지 회귀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 결집하거나, 회귀하는 비율이 낮아 노풍이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전환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림3]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

노전대통령 평가 (2007.12. 20~21조사)		2010년 정당 지지 (2010.5.4~6 조사)			
노 전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24.5%)	153명	→	21명	한나라당	13.7
		→	45명	민주당	29.4
		→	14명	국민참여당	9.2
		→	54명	무당파	35.3
		→	19명	기타	12.4
노 전대통령 공정 부정평가 (75.5%)	472명	→	226명	한나라당	47.9
		→	74명	민주당	15.7
		→	6명	국민참여당	1.3
		→	125명	무당파	26.5
		→	41명	기타	8.7
총	625명 (100%)	→	247명	한나라당	39.5
		→	119명	민주당	19.0
		→	20명	국민참여당	3.2
		→	178명	무당파	28.5
		→	61명	기타	9.8



II. 제1차 전국패널조사 세밀분석

이곤수(거버넌스센터) · 서상민(중국연구센터) · 정원철 · 정한울(여론분석센터)

1. 2010 지방선거, MB 정부 중간심판의 장될까?

중간심판론 확산요인과 억제요인 상쇄, 견제균형투표 가능성에 주목해야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는 2010년 지방선거 역시 역대 지방선거에서처럼 현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중간심판론이 작용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경우 여당의 한나라당의 패배,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부상이 점쳐질 뿐 아니라 이는 2012년 대선, 총선의 향방을 점쳐볼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노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면서 전체 16개 광역단체 중 무려 12개 지역에서 승리하고, 전국 득표율 합계에서도 무려 55.2%를 기록하여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얻은 27.1% 득표의 크게 압도한 바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 MB 정권심판론 먹힐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에 과반수에 가까운 49.9%가 공감하고 있다. 반면 49.5%의 국민들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지역에서 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경기/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은 공감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정권심판론에 대한 지지분위기는 참여정부 심판론이 표심으로 이어졌던 2006년과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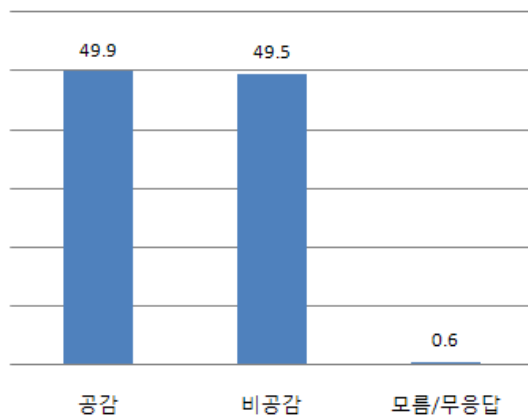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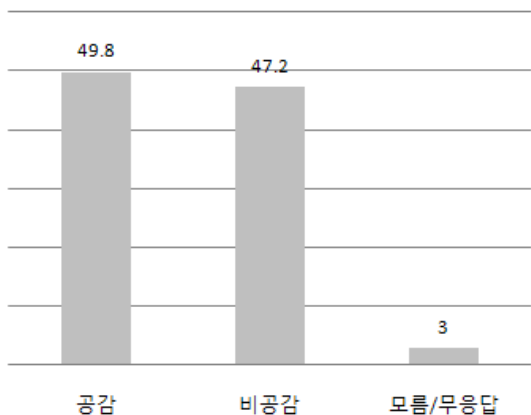
2006년 패널조사에서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이 4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7.2%로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정권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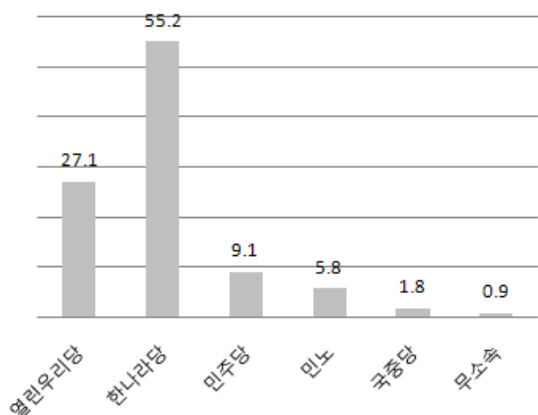
[그림1] 2006년 참여정부 심판론과 2010 MB 정부 심판론 지지규모

2006년 노정부 심판론 응답 (5.11~12, 1299명)

2010년 MB 정부 심판론 (5.4~6, 1,200명)



2006 선거결과 (광역단체장 전국득표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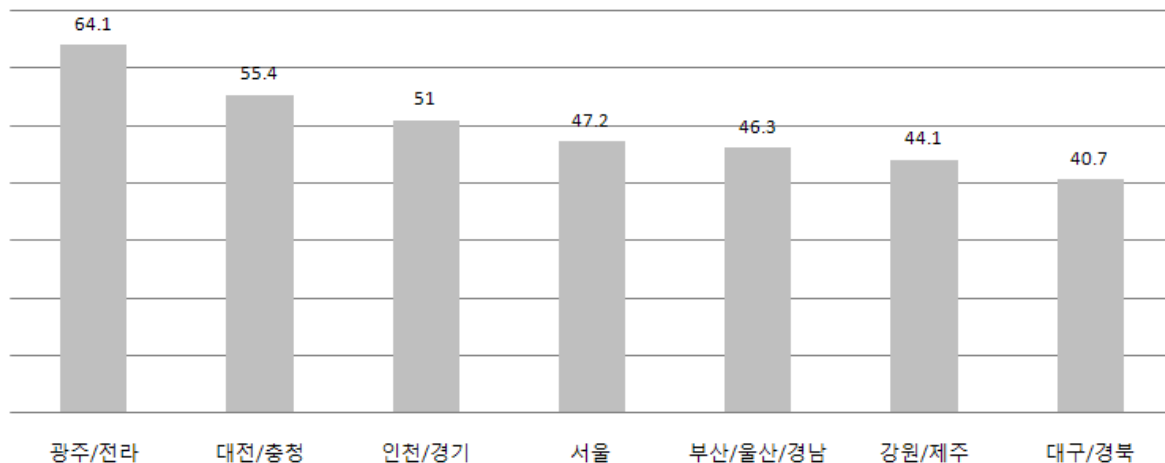


2010 선거결과

?

당선자 : 한 12, 열1, 민2, 무소속1

[그림2] 지역별 MB 정부 심판론 공감도(%)



2010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 상쇄 요인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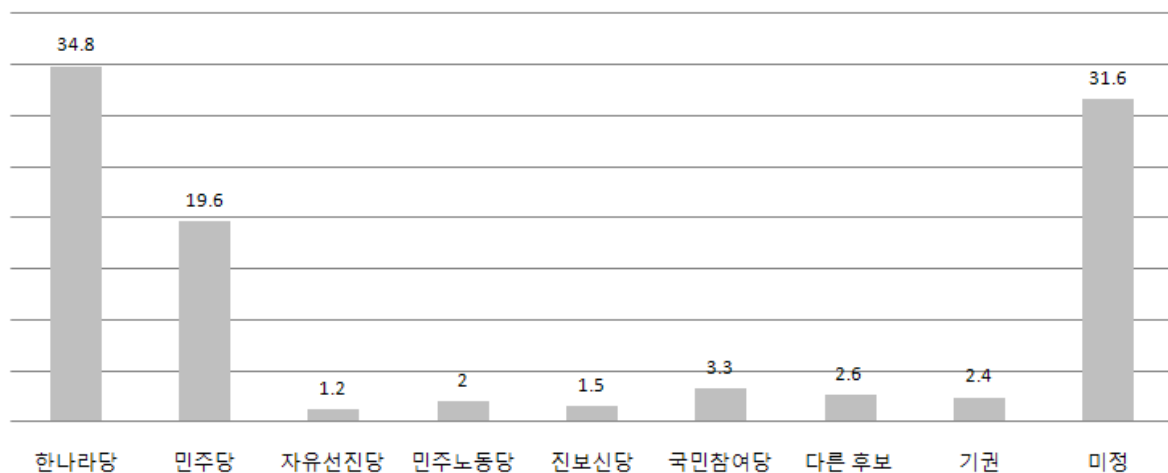
전국 여당 후보 지지 34.8%, 민주당 후보 지지 19.6%, 부동층 31.6%

견제와 균형 잡는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 커

정권심판론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2006년도와 같은 표 쏠림과 함께 야당(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영남, 야당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충북, 대전)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쏠림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러한 쏠림 현상의 조짐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지역별 출마예상자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종합한 결과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4.8%,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지지를 모두 합쳐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변수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31.6%의 부동층이 남아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간의 후보단일화 향방이 현재 부동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2010 광역단체장 어느 당 후보 찍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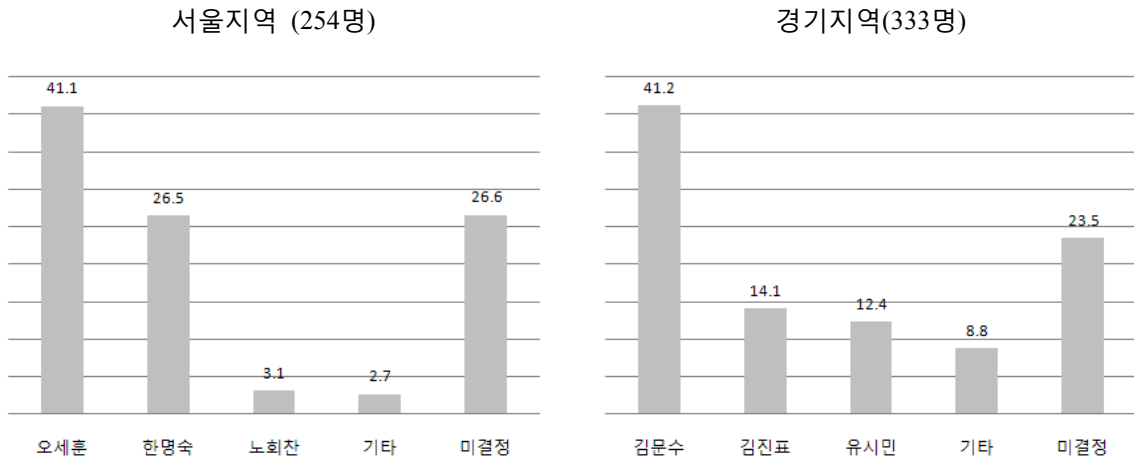
* : 모름/무응답 1.0%는 표기하지 않음 (n=1,200)

** 각 광역별 유력후보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당별로 취합함

실제 서울과 경기지역만 보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과 민주당 후보인 한명숙은 정당지지를 크게 상회하는 41.1%와 26.5%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후보 간 격차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역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41.2%로 크게 앞서 나가고 민주당 김진표 후보 14.1%,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1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야당 후보간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산술적으로 그 격차는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에서의 이러한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좁혀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4] 수도권 표심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안전한 선거인가? 견제와 균형의 투표(balancing voting) 심리 작동할 듯 교육감 선거는 전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선호

반면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총선과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들의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음이 확인되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야 지역기반이 아닌 수도권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인천, 단일화 이후 경기지역)이나 광역단체장과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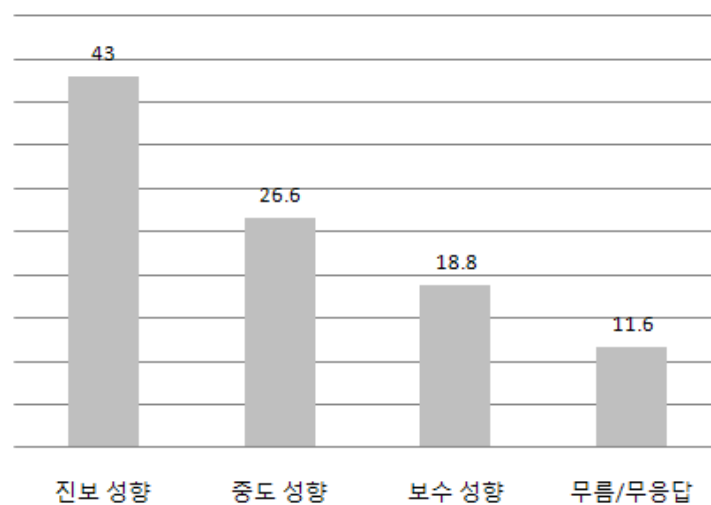
한나라당의 지지율 우위의 반사적 측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호감도 공히 낮아, 민주당 4.8점, 한나라당 4.7점, 민노당 4.0점, 선진당 3.9,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3.6점 순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끌 강한 리더십의 부재로부터 오는 반사이익의 측면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한나라당,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냉담한 시선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각 정당 별로 0점(매우 싫다)에서 5점(보통), 10점(매우 좋다)을 기준으로 각당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해보면, 민주당 4.8점, 한나라당 4.7점, 민노당 4.0점, 선진당 3.9,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3.6점 순으로 나타나 군소정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간 수준인 5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별히 호감이 가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지지선호로 이어져 이들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43.0%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후보는 18.8%, 중도적 성향의 후보는 26.6%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는 지역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며, 고학

력 고소득 층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더 선호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것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37.4%는 물론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25.5%나 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23.4%를 차지한 중도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의 지지도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보수적 성향의 공정택 교육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한 보수적 성향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림5] 2010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2. MB 심판론 왜 접화되지 않나?

정부견제심리(심판론) * 반정부 여론의 구심점 * 경제 악화 책임의 명확성 = 표쏠림

(1) 정치적 요인 : 국정 지지 및 정당지지 고공행진, MB 심판론의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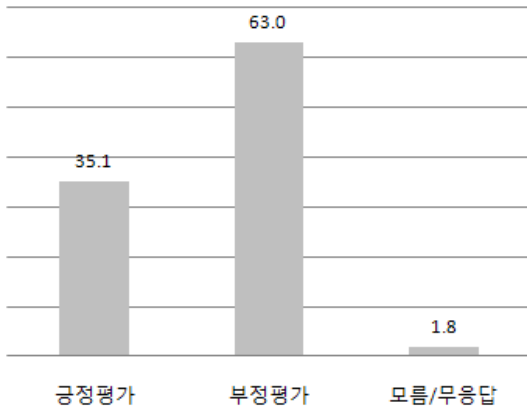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6년과 같은 MB 정권 심판론의 여건이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전국적, 전계층적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쇄요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MB 정부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여론과 견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5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47.8%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MB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에 12.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부정적인 평가여론도 63.0%로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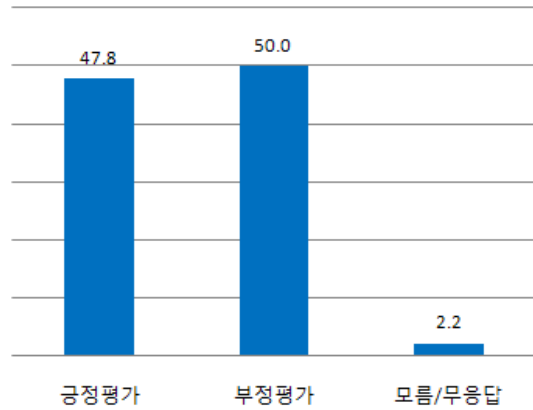
반수를 훌쩍 넘는 유권자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던 셈이다.

[그림6] MB 정부 심판론의 억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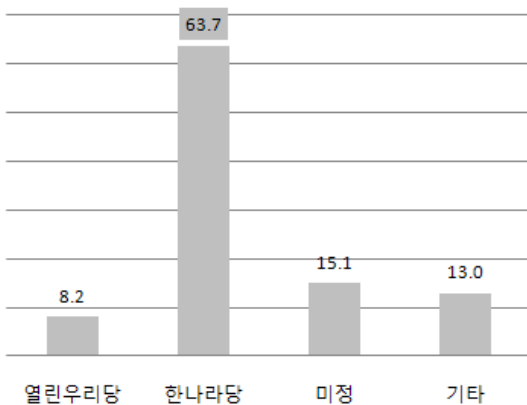
2006년 노 전대통령 지지율 (5.11~12, 12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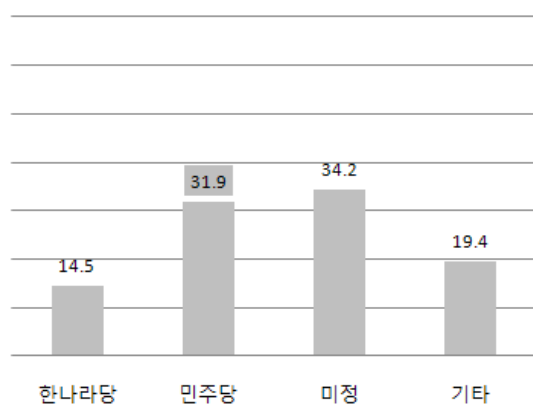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4~6, 1,200명)



노정권 심판론의 투표 선호 (강한 구심)



MB 정부심판론 찬성 시 투표선호(약한 구심)



후보자 선택 결정요인, 소속정당 요인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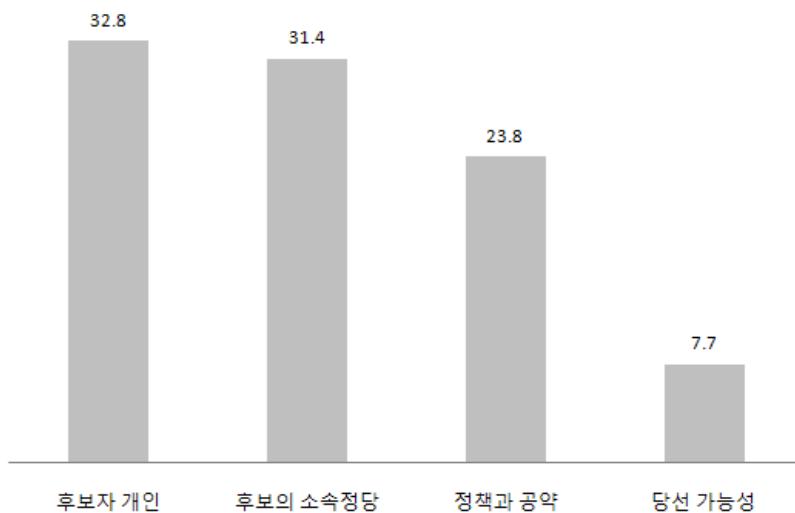
후보의 자질 32.8%, 소속정당 31.4%, 정책과 공약 23.8%, 당선가능성 7.7% 순

이번 조사에서는 눈에 띄는 점은 투표할 후보를 이미 선택한 유권자들은 소속정당이나 정책/공약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보고 선택했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후보자 선택하게 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 32.8%가 후보자자 어떤 인물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소속정당을 보고 선택했다는 유권자는 31.4%,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유권자가 23.8%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엇을 할 것이냐’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정당의 후보로 나왔느냐’가 선택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선거에서 후보 인물의 자질과 정책과 공약이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점했던 것과 달리 소속정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쉽게 형성되지도 않지만, 쉽게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그림7] 지지후보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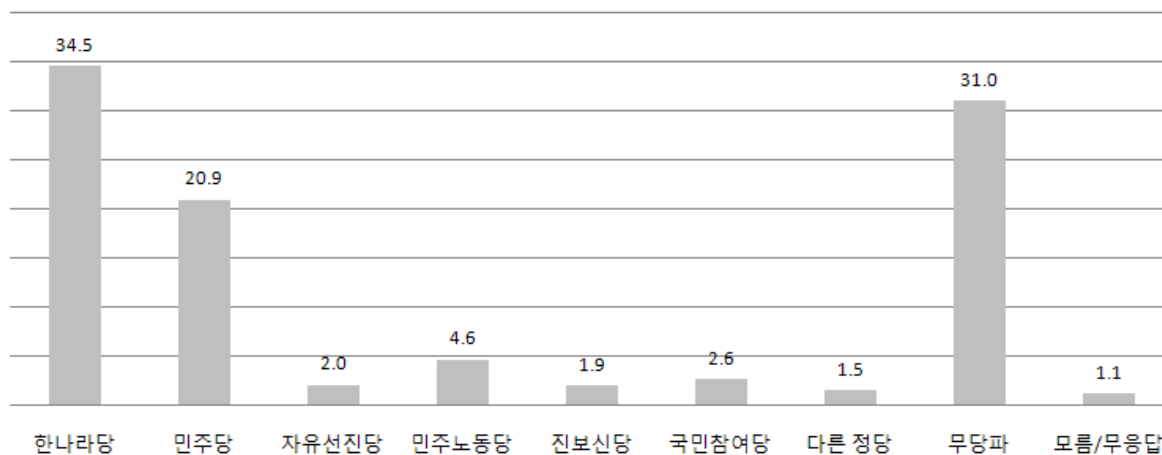


정당지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큰 듯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무당파 31.0%로 현재 표심과 정확히 일치

당 결집도의 차이, 2006년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 여섯 명 이탈, 한나라당 64.6% 지지 유지

[그림8] 정당 지지도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자유선진당 2.0%, 민주노동당 4.6%로 조사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택에 대한 응답과 거의 유사한 비율인 셈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호감도는 비슷하게 나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높은 결집도와 과거 민주당 지지층의 분산이 핵심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235명 중 39.8%만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이탈한 반면, 2006년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503명의 무려 64.6%가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결집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김대중 정부 등장 이래 권좌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당을 유지해온 한나라당의 경우 지지층이 보다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 분당, 재합당의 이합집산을 거치면 지지자들의 일체감과 충성심이 약화되며 지지기반의 이완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한나라당 지지의 높은 응집성과 민주당 지지자의 분산성

[표1] 2006년 지방선거 여야 지지자의 2010년 지방선거 투표 선호 변화(%)

2010 2006	한	민	선진	민노	진보 신당	국민 참여	무소 속	다른 후보	미정	기권	모름	계
열린 우리 235(19.5%)	14.6	39.8	1.4	1.3	1.6	7.4	2.4	0.4	29.8	1.3		100
한나라 지지 503(41.9%)	64.6	6.3	1.2	0.4	0.5	1.1	0.9	0.6	22.2	1.4	0.8	100

(2) 경제적 요인 : 2006년에 비해 경제는 더 어렵다. 그러나 책임 묻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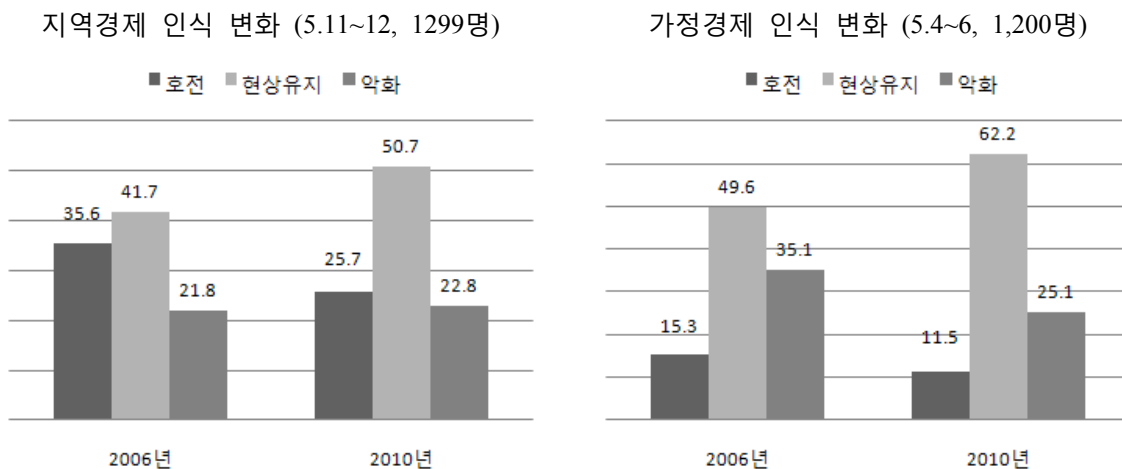
- 좋아진 건 지방정부, 나빠진 건 중앙정부 탓하는 이중성
-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장악한 한나라당 상벌 여론 공존

지난 패널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제투표의 논리가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층에서는 그 공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나 기타 경제주체에게 돌리는 반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그 책임을 지방정부나 다른 주체 대신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지역경제건 가정경제건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지만 유권자 경제인식의 이중성은 2006년과 달리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여당에게 쏠리기 보다는 분산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지방권력은 한나라당이, 중앙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 호전에 대한 공은 한나라당에게 돌아가고, 지방경제 악화에 책임은 반대로 열린우리당에게 돌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표쓸림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공히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호전의 공도 악화의 책임도 모두 한나라당에 집중되면서 서로 상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9] 2006년과 2010년 경제인식의 변화



[그림10] 이중 경제책임인식이 가져온 상반된 투표 효과 : 2006년 선거와 2010년 선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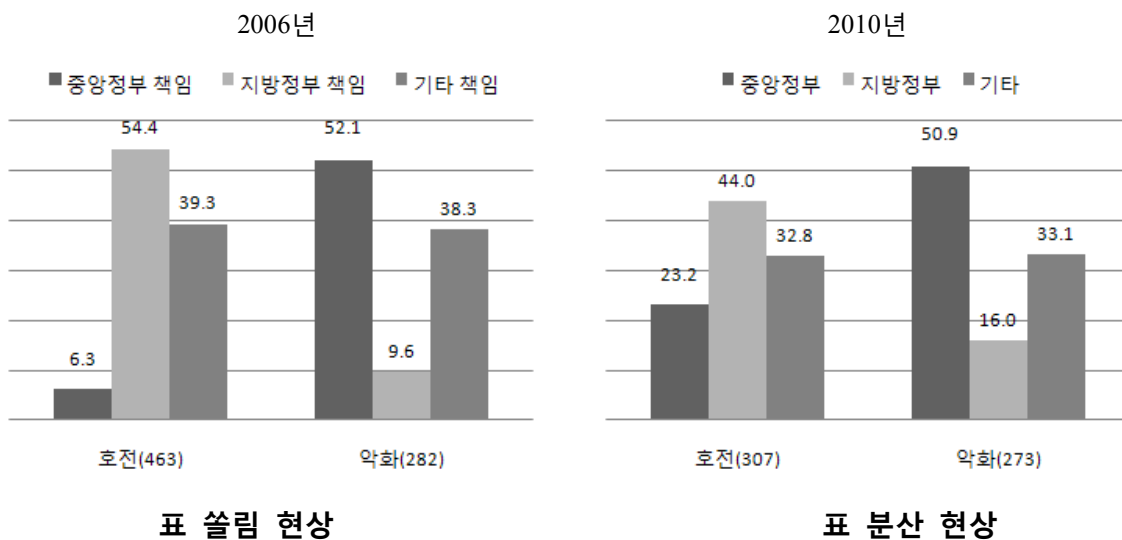


표 쓸림 현상
 좋아지면 -> 한나라당 지지 (지방정부 여당)
 나빠져도 -> 한나라당 지지 (반 열린우리당)

표 분산 현상
 좋아지면 -> 한나라당(지방정부 여당)
 나빠지면 -> 민주당 지지(반 한나라당)

(3) 지방선거 변수 : 현안 이슈의 영향력 상쇄될 듯

경제 및 통합 : 의제설정과 능력 평가에서 우위에 선 한나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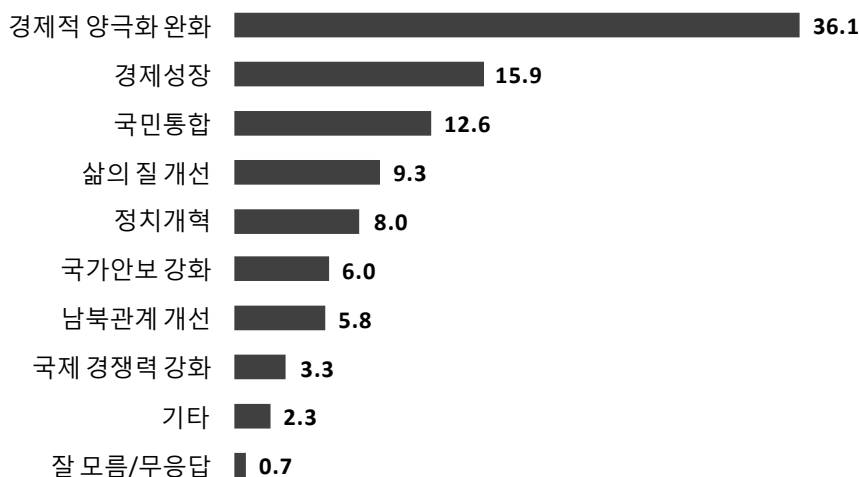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1%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경제성장” 역시 15.9%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통합”이 12.6%로 조사된 것까지



를 합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삶의 질 개선”이나 “정치개혁”은 각각 9.3%와 8.0%로 나타났다. 반면 천안함 사건이나 남북관계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강화라든지 남북관계개선과 같은 안보관련 국정과제는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관련 국정과제와 국가안보강화를 꼽은 응답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개혁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2%에 달하는 무당파(지지정당이 없음 + 모름/무응답)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국가안보 강화나 삶의 질 개선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 성장,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림11] 최우선 국정 의제



3대 의제 및 안보/국제경쟁력 등 외교안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 한나라당이 우위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의제는 민주당 우위.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정과제별로 해당 국정과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정당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라당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안보강화까지 비교적 고른 응답비율들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치개혁에서만 한나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국민통합 등의 아젠다나 외교안보 의제가 부각될 경우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반면,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아젠다가 부각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의제가 최우선적이라고 꼽은 응답은 13.8% 수준에 불과해 선거 아젠다 경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림12] 최우선 국정 의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없다
국민통합	39.5	25.0	3.3	22.4
경제적 양극화 완화	36.5	20.3	8.1	21.2
남북관계 개선	32.9	47.1	0.0	7.1
정치개혁	10.3	37.1	7.2	35.1
경제성장	56.0	12.0	2.6	20.9
국제 경쟁력 강화	62.5	7.5	2.5	20.0
삶의 질 개선	23.4	19.8	4.5	27.9
국가안보 강화	69.4	9.7	0.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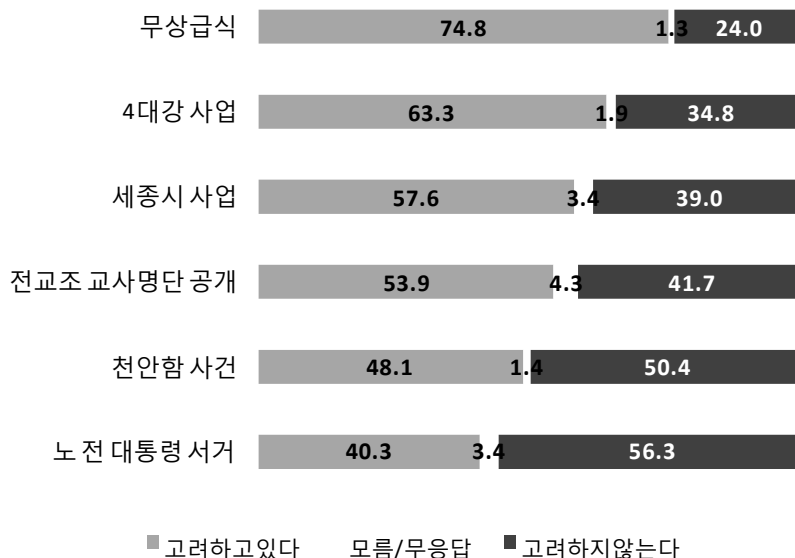
* 5% 이상의 응답비율을 얻은 정당만 포함

지방선거 6대 이슈의 영향력

무상급식 > 4대강 사업 > 세종시 사업 > 전교조 명단공개 > 천안함 사건 > 노 전 통령 서거 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각각의 이슈들을 얼마나 고려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무상급식 > 4대강 사업 > 세종시 사업 > 전교조교사 명단공개 > 천안함 사건 > 노 전 대통령 서거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들이 높았다.

[그림13] 이슈별 지방선거 투표선택 시 고려여부



이 중에서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의 경우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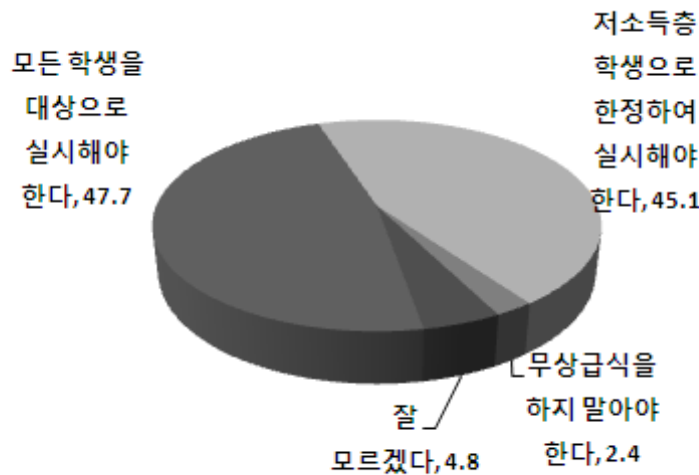


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야당이,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별로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부자급식론 효과 본 듯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7%와 45.1%의 백중세로 나타났다. 이슈가 등장한 초기에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기초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거의 대등해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논리가 그동안 많이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14] 무상 급식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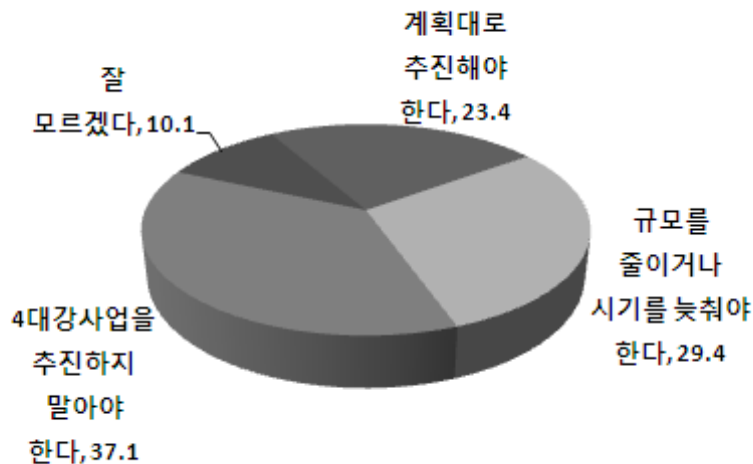
4대강은 친 야권 이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론 또는 신중론이 높았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4%에 머무른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7.1% 그리고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신중론과 부정론을 지지하는 응답비율도 각각 31.1%와 15.3%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4대강 이슈의 경우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 본 결과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59.6%로 가장 많았고, 전보다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거나 야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비율도 각각 10.7%와 14.7%로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데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응답비율은 4.5% 그리

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꿨다는 응답비율은 9.1%였다. 야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지지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로 야당 쪽에 보다 이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5]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



세종시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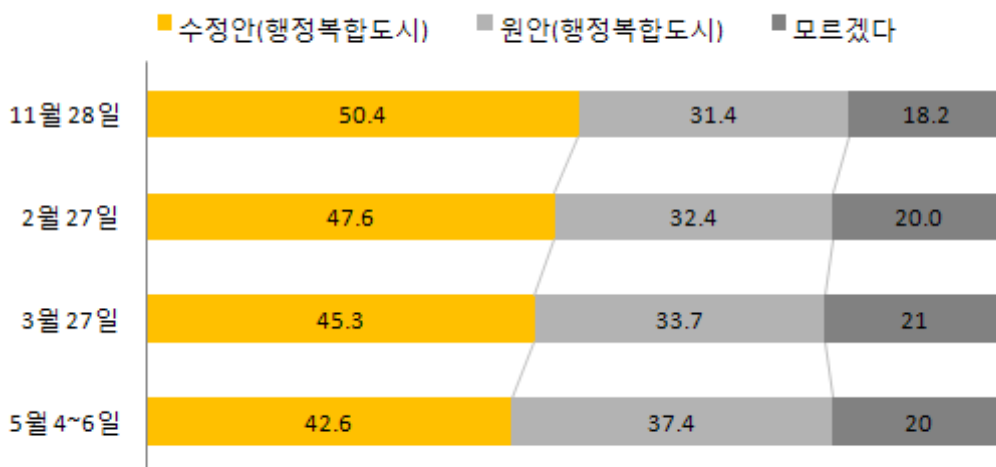
수정안 줄고, 충청권/TK/호남 반발 커 민주 유리, 서울 및 수도권에선 한나라에 유리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에 대한 지지보다 5.2% 포인트 많았다. 원안 지지 37.4%, 수정한 지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여야 간 그 이해득실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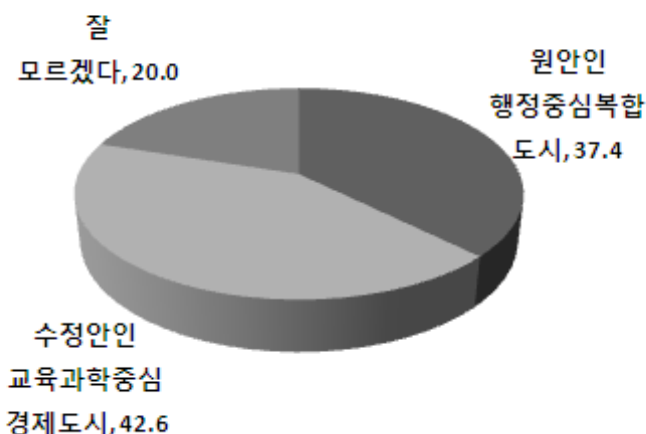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52.1%가 원안을 지지하여 수정안 지지 34.5%를 크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 44.1%, TK 지역에서 41.8%가 원안을 지지하여 수정안 지지 여론을 앞서고 있다. 역차별 우려가 컸던 TK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서울에서 수정안 찬성 여론이 46.9%로 원안 지지 36.2%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수정안 지지가 45.6%, 원안 지지가 33.4%로 수정안 지지가 많았다. 최근 수도권에서 MB 정부 심판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와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 세종시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6] 세종시에 대한 태도



*주: 11월~3월 조사는 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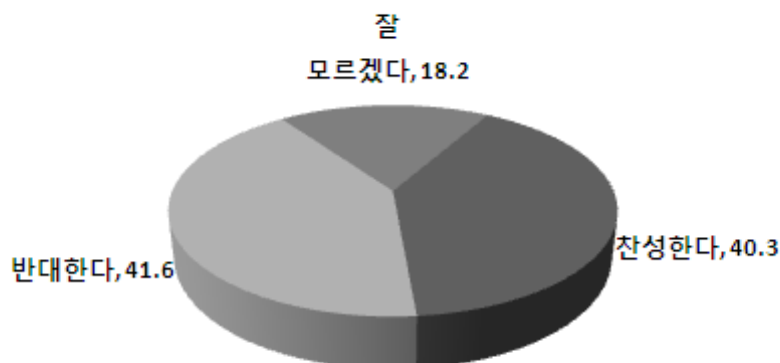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에는 찬반 팽팽
법원 판결 무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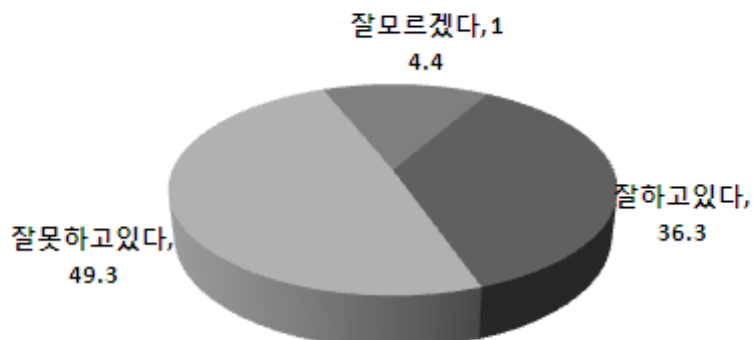
한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있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 확인된다. 우선, 교사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3%, 41.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의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49.3%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7]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태도



[그림18] 법원의 금지 판결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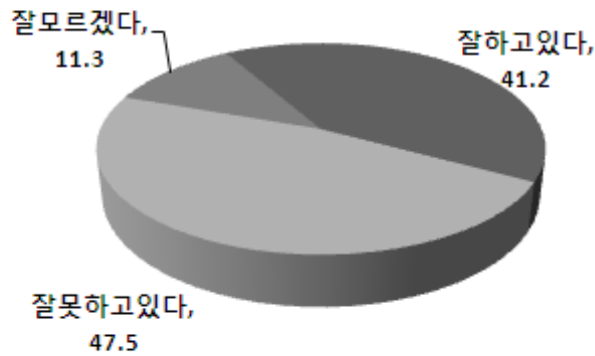
천안함 정부 대처 “잘하고 있다” 41.2%, “잘못하고 있다” 47.5%

잘못한 이유 “지나치게 북한 탓으로 돌려” 56.6% vs. “너무 눈치보고 있다” 39.9%

여야 지지에 영향 없어 65.4%, 여야 이해득실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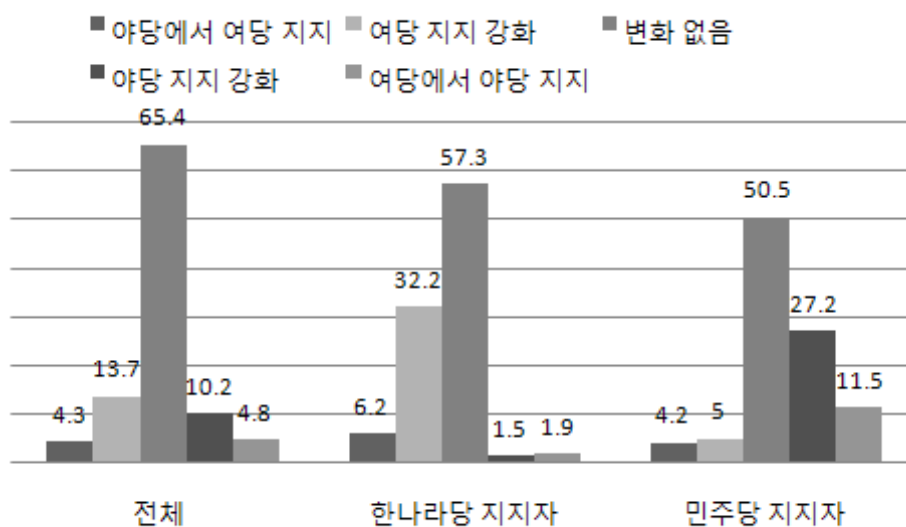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잘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7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39.9%였고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한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56.6%였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의 신중한 자세에서 점차 북한 원인론으로 급속하게 무게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19] 정부의 천안함 대처 평가



천안함 사건이 실제 투표선호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여야에 대한 지지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5.4%였지만 전보다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3.7%, 야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0.2%로 약간 여당 결집에 유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바꾼 경우는 4.3%, 반대로 여당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도 4.8% 큰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면 천안함 사건의 경우 종합하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림19-1]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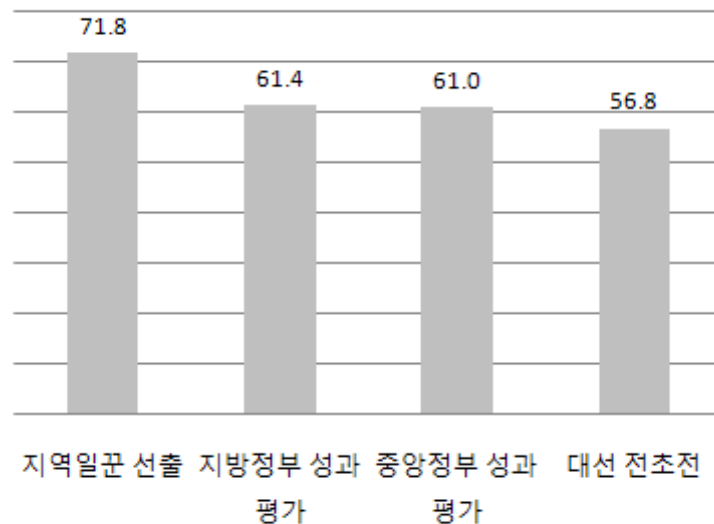
(4)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요인의 상호작용 작동 : 지방권력 심판론 확산은 미지수
 중앙정치 요인 못지 않게 지방정치 요인 작동
 단체장에 실망은 심판보다 기권으로 이어져

국민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여야가 선거구도를 짜는데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는데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라는데 공감한다는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61.0%,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라는데 공감하는 유권자는 61.4%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데는 이보다 약 10% 정도 많은 71.8%의 유권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79.4%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데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앙/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지방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있는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를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전체 유권자의 41.1%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 때문이다.

[그림20] 2010 지방선거의 의미 : 중앙정치요인과 지방정치요인



현직자 평가에 따른 투표행태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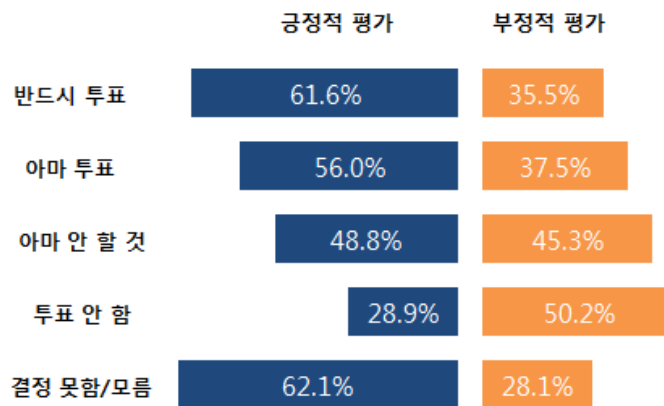
현직자 업적 평가 긍정평가자는 투표장으로, 부정적인 평가자는 투표 심판 대신 기권 선택

전체응답자들의 현직광역단체장의 시/도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9.1%로 나타나 현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사회계층별로 보면, 대통령국정지지율 패턴과 유사하게 고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현직단체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지만, 소득계층에서는 대통령지 지율과 달리 일관된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투표의향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자 층에서는 긍정적 평가자들이 많은 반면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층에서는 부정적 평가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는 투표를 통해 보상할 개연성이 높은 반면에, 부정적 평가자는 징별로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선거가 현직단체장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현직자들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투표에서의 심판보다는 기권으로 이어지는 경향 역시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투표 표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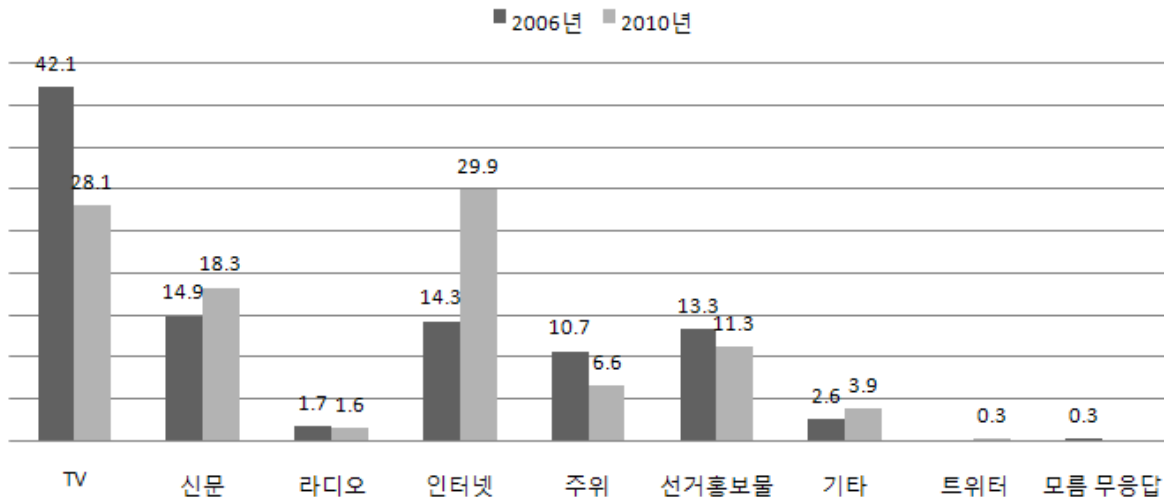
[그림21] 현직자 평가별 투표의향 편차



3. 기타 변수

정보취득경로 : 인터넷 매체 영향력 급증, TV 줄고, 신문은 다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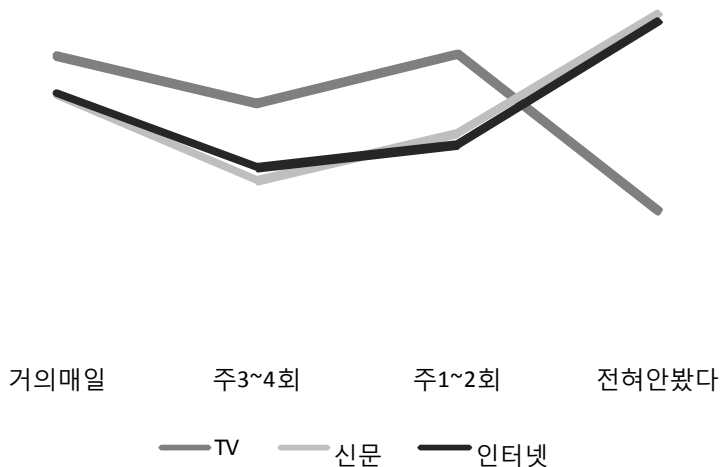
[그림22] 지방선거 최대 정보취득 경로 변화 : 2006년과 2010년



이는 2006년 조사와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보여준다. 2006년 조사에서는 TV로부터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던 반면, 신문은 14.9%, 인터넷은 14.3% 수준에 그쳤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경로는 인터넷 29.9% > TV 28.1% > 신문 18.3% > 선거홍보물 11.3% 순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TV 등 주요 언론매체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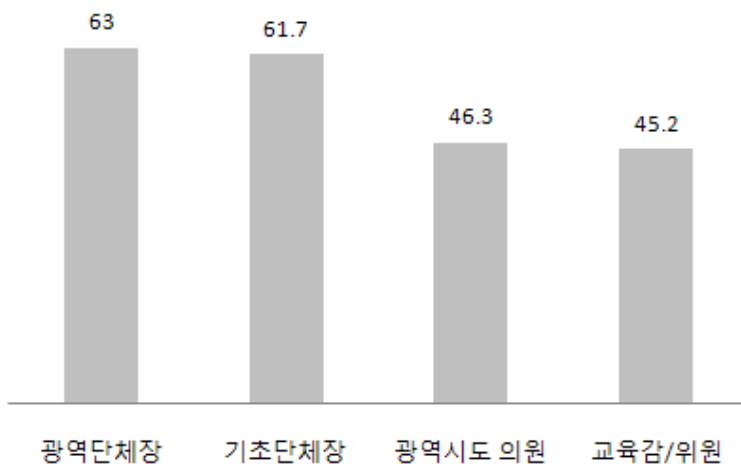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TV가 가장 높고 신문과 인터넷은 TV보다 지방선거 관련 정보 획득과정에서 접촉 횟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매일	주3~4회	주1~2회	전혀안봤다
TV	30.4	25.4	30.7	13.5
신문	26.0	16.7	21.8	35.0
인터넷	26.3	18.3	20.8	34.2

선거관심도와 투표의향
기초의원 · 교육감 선거 관심 낮아

[그림23] 선거관심도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시도의원이나 교육감에 비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관심은 63%,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61.7%인 반면, 광역의원 선거



46.3%, 교육감 선거 45.2%에 비해 높았다. 광역단체 선거의 경우 2006년 5월 조사에서 70.7%가 선거관심도를 기록했던 것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낮은 투표율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지지결집도가 높은 정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투표결정요인 심층 분석

1.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대통령지지율은 47.8%로 전월(4월 24일=46.3%) 대비 1.5% 상향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계층별 대통령지지 패턴은 고연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23.4%, 30대에서 36.4%로 평균지지율보다 낮고, 40대는 46.3%로 평균 지지율에 가깝지만, 50대는 57.5%, 60대 이상은 79.3%로 평균지지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층에서 무려 69.0%, 고졸층에서 56.8%, 대재 이상층에서 38.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65.9%, 1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51.5%, 2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46.4%, 300만원대 응답자 45.8%, 400만원 이상 45.6%로 나타나,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62.9%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 51.7%, 서울 50.0%, 강원·제주 48.5%로 평균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46.0%, 대전·충청 45.7%로 평균 지지율에 약간 못 미친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28.9%로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87.2%로 나타나 여당일체감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유선진당 지지층도 49.5%로 평균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민주당 21.0%, 민주노동당 19.6%, 국민참여당 9.4%, 진보신당 9.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의 국정지지율도 32.8%로 평균지지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 57.8%로 가장 높지만 불교도 56.6%로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천주교는 45.9%로 평균지지율을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 무종교층이 38.6%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지지율과 투표의향과의 관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 모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입장은 각각 48.9%와 49.3%로 비슷한 반면, 투표 의향이 없는 입장은 각각 32.6%와 57.7%



로 나타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일수록 투표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투표의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집단은 지지층(53.6%)이 반대층(44.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계층별 국정지지율

	사례수 (명)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대체로 잘못하 고 있다	매우 잘못하 고 있다	③+④	모름/무 응답	계
전체	(1200)	10.0	37.8	47.8	29.8	20.2	50.0	2.2	100.0
연령									
19 - 29 세	(238)	3.7	19.7	23.4	38.0	35.5	73.5	3.1	100.0
30 대	(260)	3.0	33.5	36.4	37.5	24.0	61.5	2.1	100.0
40 대	(271)	5.4	41.0	46.3	31.0	21.7	52.6	1.0	100.0
50 대	(202)	18.6	38.9	57.5	26.5	13.9	40.4	2.0	100.0
60 대 이상	(230)	22.4	56.9	79.3	14.0	3.8	17.7	3.0	100.0
학력									
중졸 이하	(99)	20.1	48.9	69.0	19.9	2.9	22.8	8.1	100.0
고졸	(430)	13.2	43.5	56.8	26.7	15.8	42.5	0.7	100.0
대재 이상	(665)	6.3	32.6	38.9	33.0	25.8	58.8	2.3	100.0
모름 / 무응답	(5)	20.5	22.2	42.8	57.2	0.0	57.2	0.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2)	19.1	46.9	65.9	19.4	9.1	28.6	5.5	100.0
100 - 199만원	(149)	15.3	36.2	51.5	29.8	16.2	46.0	2.5	100.0
200 - 299만원	(259)	8.4	38.0	46.4	30.0	21.1	51.1	2.5	100.0
300 - 399만원	(245)	8.7	37.1	45.8	31.1	21.6	52.7	1.5	100.0
400만원 이상	(394)	7.8	37.8	45.6	30.9	22.8	53.6	0.8	100.0
모름 / 무응답	(60)	10.1	30.1	40.2	31.7	20.6	52.3	7.5	100.0
권역									
서울	(254)	11.8	38.2	50.0	32.1	17.2	49.3	0.8	100.0
인천 / 경기	(333)	8.3	37.7	46.0	28.1	23.4	51.5	2.4	100.0
대전 / 충청	(121)	6.9	38.8	45.7	27.0	23.4	50.4	3.9	100.0
광주 / 전라	(124)	1.5	27.5	28.9	39.6	27.5	67.2	3.9	100.0
대구 / 경북	(126)	18.0	44.9	62.9	21.5	14.9	36.5	0.6	100.0
부산/울산/경남	(192)	13.3	38.3	51.7	30.2	16.0	46.1	2.2	100.0
강원 / 제주	(50)	8.1	40.4	48.5	30.5	17.4	47.9	3.5	100.0
종교									
불교	(239)	12.3	44.3	56.6	27.9	12.7	40.6	2.9	100.0
천주교	(161)	11.6	34.3	45.9	26.0	25.0	51.1	3.0	100.0
개신교	(294)	13.0	44.7	57.8	26.6	13.8	40.4	1.8	100.0
다른종교	(51)	7.7	28.7	36.4	35.2	26.3	61.5	2.1	100.0
무교	(449)	6.0	32.7	38.6	33.3	26.2	59.5	1.9	100.0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414)	26.1	61.1	87.2	10.9	1.2	12.1	0.7	100.0
민주당	(251)	0.8	20.2	21.0	41.1	36.3	77.4	1.5	100.0
자유선진당	(24)	8.4	41.2	49.5	33.8	16.7	50.5	0.0	100.0
민주노동당	(55)	0.0	19.6	19.6	36.7	43.7	80.4	0.0	100.0
창조한국당	(4)	0.0	0.0	0.0	24.1	51.0	75.1	24.9	100.0
진보신당	(23)	4.7	4.6	9.3	26.1	64.6	90.7	0.0	100.0
국민참여당	(31)	0.0	9.4	9.4	34.4	56.3	90.6	0.0	100.0
기타	(13)	8.6	30.1	38.7	53.5	7.7	61.3	0.0	100.0
지지정당 없음	(372)	1.4	31.5	32.8	40.6	22.0	62.7	4.5	100.0
모름 / 무응답	(14)	6.7	33.3	40.0	38.1	7.0	45.1	14.9	100.0
투표의향									
반드시 투표	(765)	12.0	36.9	48.9	27.5	21.8	49.3	1.9	100.0
아마 투표	(231)	5.8	40.4	46.3	35.7	15.8	51.6	2.2	100.0
아마 안 할 것	(49)	10.2	28.3	38.5	36.6	22.6	59.3	2.3	100.0
투표 안 함	(33)	3.0	29.5	32.6	32.6	25.1	57.7	9.8	100.0
결정못함/무응답	(118)	7.4	46.2	53.6	28.1	16.0	44.0	2.3	100.0



2. 정당지지율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4.5%, 민주당이 20.9%로 나타났고, 무당파가 3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민주노동당 4.6%, 국민참여당 2.6%, 자유선진당 2.0%, 진보신당 1.9%, 창조한국당 0.4%, 기타 1.1%로 군소정당의 지지율은 5%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월대비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4월의 29.7%에서 4.8% 상승한 34.5%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달 17.6%에서 3.3%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3월 대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다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의 결집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모두 5%의 미만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무당파 층은 4월 27.3%에서 31.0%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군소 정당 지지철회자들이 무당파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무당파층의 변동이 경쟁지역의 선거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성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남자 33.8%, 여자 35.2%이고, 민주당 남자 22.2%, 여자 19.8%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한편, 무당파층에서는 남자 29.9%, 여자 32.0%로 지지정당이 없는 여성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20대 이하의 15.4%, 30대의 23.5%, 40대의 28.7%, 50대의 42.8%, 60대 이상의 66.3%로 구성되어 50대 이상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대 이하의 25.0%, 30대의 22.5%, 40대의 22.1%, 50대의 23.6%, 60대 이상의 11.0%로 나타나 20대 층에서는 한나라당 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3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한나라당에 뒤처져 있다. 한편, 무당파는 20대 이하 42.9%, 30대 36.5%, 40대 33.9%, 50대 23.9%, 60대 이상 15.2%로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무당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53.6%, 100만원대의 35.6%, 200만원대의 34.3%, 300만원대의 33.9%, 400만원이상의 31.7%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만원대의 23.4%, 400만원이상의 24.8%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100만원미만의 14.9%, 100만원대의 15.4% 지지에 그치고 있다. 무당파층은 100만원대(37.2%)와 300만원대(33.5%), 400만원대(30.5%)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정당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5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인천경기(30.4%)와 광주전라(11.3%)를 제외한 부산경남(40.6%), 서울(37.6%), 강원제주(35.2%), 대전충청(34.7%)에서 모두 평균지지율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만 57.8%로 강세를 보이고, 대전충청(22.1%)과 인천경기(21.8%)에서만 평균 지지율을 상회할 뿐,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열세에 있다(서울 18.6%, 강원제주 11.3, 부산경남 10.2 대구경북 5.7%). 무당파층의 규모는 부산경남 34.3%, 서울



32.5%, 인천경기 32.0%, 강원제주 31.4, 대구경북 30.2%, 대전충청 29.7%, 광주전라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의향별 정당지지율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은 한나라당이 37.2%로 가장 많다. 그런데 투표하지 않겠다는 층과 투표여부를 정하지 못한 층에서는 무당파가 각각 50.7%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 계층별 정당 지지율

	사례수 (명)	한나라 당	민주 당	자유선 진당	민주노 동당	창조한 국당	진보신 당	국민참 여당	다른 정당	무당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200)	34.5	20.9	2.0	4.6	0.4	1.9	2.6	1.1	31.0	1.1	100.0
성별												
남자	(593)	33.8	22.0	2.1	4.3	0.7	2.0	3.5	0.8	29.9	0.8	100.0
여자	(607)	35.2	19.8	1.8	4.9	0.0	1.9	1.6	1.3	32.0	1.4	100.0
연령												
19 - 29 세	(238)	15.4	25.0	1.3	6.3	0.9	2.6	4.3	0.9	42.9	0.4	100.0
30 대	(260)	23.5	22.5	1.5	8.3	0.4	2.3	2.3	1.5	36.5	1.2	100.0
40 대	(271)	28.7	22.1	1.5	5.0	0.4	2.2	3.9	1.5	33.9	0.8	100.0
50 대	(202)	42.8	23.6	1.9	2.4	0.0	1.6	1.5	1.0	23.9	1.5	100.0
60 대 이상	(230)	66.3	11.0	3.7	0.0	0.0	0.8	0.5	0.4	15.2	1.9	100.0
학력												
중졸 이하	(99)	51.6	18.6	1.0	1.8	0.0	1.1	0.0	2.0	22.9	1.0	100.0
고졸	(430)	38.1	20.2	2.9	4.3	0.0	1.2	1.1	1.1	28.9	2.1	100.0
대재 이상	(665)	29.8	21.9	1.5	5.3	0.6	2.5	3.9	0.7	33.5	0.3	100.0
모름 / 무응답	(5)	17.7	0.0	0.0	0.0	0.0	0.0	0.0	20.5	39.6	22.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2)	53.6	14.9	2.9	3.5	0.0	1.1	1.3	1.1	20.5	1.1	100.0
100 - 199만원	(149)	35.6	15.4	1.9	3.2	0.7	0.6	1.4	0.7	37.2	3.3	100.0
200 - 299만원	(259)	34.3	23.4	1.5	5.2	0.4	2.3	4.1	1.6	27.2	0.0	100.0
300 - 399만원	(245)	33.9	18.5	1.7	5.9	0.4	1.2	2.5	1.5	33.5	1.0	100.0
400만원 이상	(394)	31.7	24.8	2.3	4.3	0.0	3.0	2.3	0.5	30.5	0.5	100.0
모름 / 무응답	(60)	24.8	17.4	1.7	3.6	1.9	0.0	2.9	1.8	40.7	5.1	100.0
권역												
서울	(254)	37.6	18.6	1.6	3.5	0.4	2.7	1.2	1.5	32.5	0.4	100.0
인천 / 경기	(333)	30.4	21.8	0.6	3.7	1.0	3.3	4.1	1.5	32.0	1.7	100.0
대전 / 충청	(121)	34.7	22.1	6.5	3.9	0.0	0.0	3.0	0.0	29.7	0.0	100.0
광주 / 전라	(124)	11.3	57.8	2.1	4.2	0.0	0.0	0.7	0.0	21.7	2.3	100.0
대구 / 경북	(126)	52.5	5.7	0.0	3.0	0.0	0.7	4.0	1.5	30.2	2.4	100.0
부산/울산/경남	(192)	40.6	10.2	2.1	8.5	0.0	1.7	2.1	0.0	34.3	0.5	100.0
강원 / 제주	(50)	35.2	11.3	5.9	8.2	0.0	2.1	1.4	4.5	31.4	0.0	100.0
투표의향												
반드시 투표	(765)	37.2	22.0	2.0	4.6	0.5	2.5	3.0	0.9	26.1	1.2	100.0
아마 투표	(231)	33.9	20.4	2.1	4.9	0.0	0.9	1.0	1.4	35.0	0.4	100.0
아마 안 할 것	(49)	31.1	25.0	0.0	1.8	0.0	4.1	4.4	0.0	33.6	0.0	100.0
투표 안 함	(33)	26.5	14.3	0.0	3.3	0.0	0.0	5.3	0.0	50.7	0.0	100.0
결정못함무응답	(118)	22.9	14.8	2.6	5.8	0.0	0.0	0.8	2.6	47.9	2.5	100.0

한편, 정당호감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에 모든 정당이 5점 미만으로 나타나 한국의 정당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비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정당별 호감도에서는 정당지지율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정당호감도는 4.7점으로 민주당의 호감도 4.8점 보다 오히려 낮았다. 그런데 이들 양당에 국민들의 호감도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호오(好惡)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7점 이상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비율이 29.2%로 민주당의 20.8%보다 높으면서 3점 이하의 비호감에서도 32.2%로 민주당의 23.8%보다 약 10%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민주당은 중간인 5점에서 35.7%로 한나당 22.9%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이것은 한나라당은 좋아하는 층과 싫어하는 층이 분리되는 분명한 정당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심어줄만한 정당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군소정당의 호감도는 민노동 4.0점, 자유선진당 3.9점, 진보신당 3.6점, 국민참여당 3.6점의 순이었다.

[표4] 정당 선호도 평가

	사례수 (명)	0-2 (싫어함)	3	4	5	6	7	8-10 (좋아함)	모름/무 응답	평균
한나라당	(1200)	23.1	9.1	6.7	22.9	8.4	10.4	18.6	0.8	4.7
민주당	(1200)	14.0	9.8	9.7	35.7	9.8	9.0	10.9	1.0	4.8
자유선진당	(1200)	19.7	14.8	11.5	38.6	5.4	2.5	2.4	5.0	3.9
민주노동당	(1200)	25.6	11.8	9.3	29.9	7.3	5.9	6.1	4.1	4.0
진보신당	(1200)	27.9	12.8	9.7	30.4	5.2	2.5	4.3	7.2	3.6
국민참여당	(1200)	27.5	11.7	7.7	30.8	4.5	2.5	4.1	11.2	3.6

3. 경제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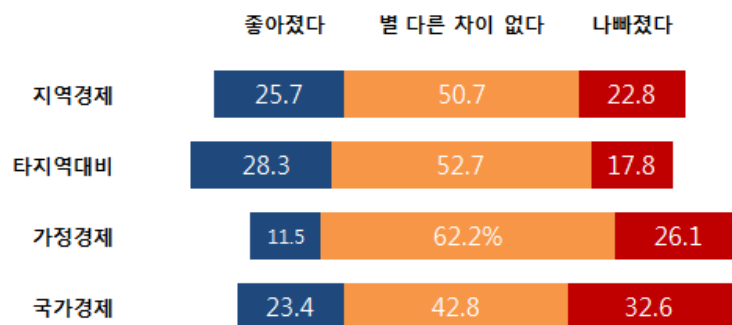
경제여건에 대한 평가

광역단체장의 시/도정운영 성과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난 4년간 지역의 경제여건에 대한 평가적 인식을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전체의 절반인 50.7%이며, 호전되었다는 평가(25.7%)가 악화되었다는 평가(22.8%)보다 약간 많았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여건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52.7%가 다른 지역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나빠졌다는 응답(17.8%)보다는 좋아졌다는 인식(28.3%)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인식 자체는 유권자에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과 달리 개인의 가정살림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형편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26.7%로 좋아졌다는 응답 11.5%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지난 1년간 나라살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42.8%이지만,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23.4%보다 나빠졌다는 인식이 32.6%로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의 경제투표 가능성은 유권자의 가정경제에 따른 이기적 투표 혹은 국가경제여건의 인식에 따른 사회적 투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24]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



권역별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좋아졌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그리고 광주전라 등 영호남 지역에서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수도권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그리고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제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즉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43.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구경북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같이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은 권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즉 광주전라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들의 응답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40.8%)이 가장 많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국가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부산경남에서 2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전충청 25.2%, 서울 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제여건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지역별 평가는 각각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경제투표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지역별 경제인식 편차

	사례수 (명)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①+②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지역경제 여건	(1200)	2.7	23.0	25.7	50.7	15.4	7.4	22.8	0.9	100.0
서울	(254)	4.3	35.2	39.5	43.0	12.8	3.9	16.7	0.8	100.0
인천 / 경기	(333)	2.7	26.8	29.5	50.2	12.4	6.6	19.1	1.3	100.0
대전 / 충청	(121)	3.1	14.4	17.4	59.8	16.1	5.8	21.9	0.9	100.0
광주 / 전라	(124)	1.5	13.9	15.5	56.4	17.3	10.0	27.3	0.8	100.0
대구 / 경북	(126)	0.7	13.2	13.9	51.4	17.6	17.1	34.7	0.0	100.0
부산/울산/경남	(192)	3.1	18.7	21.8	48.9	20.0	8.2	28.2	1.1	100.0
강원 / 제주	(50)	0.0	19.5	19.5	62.3	18.2	0.0	18.2	0.0	100.0
타지역대비 여건	(1200)	2.7	25.6	28.3	52.7	12.8	5.0	17.8	1.1	100.0
서울	(254)	5.5	38.3	43.7	46.5	7.8	1.6	9.4	0.4	100.0
인천 / 경기	(333)	1.8	32.6	34.4	52.9	8.9	1.8	10.7	2.0	100.0
대전 / 충청	(121)	2.7	22.0	24.7	57.6	10.3	5.7	16.1	1.6	100.0
광주 / 전라	(124)	2.8	8.0	10.8	60.5	18.6	9.3	27.9	0.8	100.0
대구 / 경북	(126)	2.0	18.9	20.9	38.4	26.9	13.8	40.7	0.0	100.0
부산/울산/경남	(192)	1.5	18.9	20.4	56.8	14.5	6.7	21.2	1.6	100.0
강원 / 제주	(50)	0.0	11.0	11.0	71.8	15.0	2.2	17.2	0.0	100.0
가정경제	(1200)	0.5	11.0	11.5	62.2	21.2	4.9	26.1	0.2	100.0
서울	(254)	0.4	15.2	15.6	61.3	20.4	2.4	22.7	0.4	100.0
인천 / 경기	(333)	0.3	10.6	10.9	61.9	22.4	4.4	26.8	0.4	100.0
대전 / 충청	(121)	0.8	6.8	7.6	66.4	22.6	3.3	26.0	0.0	100.0
광주 / 전라	(124)	1.2	10.1	11.2	56.8	19.2	12.8	32.0	0.0	100.0
대구 / 경북	(126)	0.0	11.2	11.2	61.4	22.1	5.2	27.3	0.0	100.0
부산/울산/경남	(192)	0.6	11.4	12.0	62.0	20.3	5.7	26.0	0.0	100.0
강원 / 제주	(50)	0.0	3.8	3.8	74.2	19.8	2.2	22.1	0.0	100.0
국가경제	(1200)	2.0	21.5	23.4	42.8	26.1	6.4	32.6	1.2	100.0
서울	(254)	0.8	24.2	25.0	46.0	22.3	4.7	27.1	2.0	100.0
인천 / 경기	(333)	2.1	21.0	23.2	39.0	30.6	6.6	37.1	0.7	100.0
대전 / 충청	(121)	3.8	21.4	25.2	41.5	27.0	6.3	33.3	0.0	100.0
광주 / 전라	(124)	1.0	14.9	15.9	42.5	28.7	12.1	40.8	0.8	100.0
대구 / 경북	(126)	3.8	20.5	24.4	51.5	21.2	2.1	23.3	0.9	100.0
부산/울산/경남	(192)	2.0	25.6	27.6	37.6	25.9	7.3	33.2	1.6	100.0
강원 / 제주	(50)	0.0	14.1	14.1	53.0	20.8	8.1	28.9	4.0	100.0



EAI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치권 · 학계 · 언론계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거 보도 및 선거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도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방선거패널조사는 조사대상과 활용 목적에 따라 ① 5개 지역 패널조사(3회) ② 전국단위 패널조사 (2회)로 이원화 하여 진행한다.

① 지역패널조사 : 주요 지역 판세변화 및 선거결과 예측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각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 지역 유권자 대상의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서울과 충남은 2006년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이며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지역별로 600명을 구성하여 총 3회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국패널조사 : 중앙정치 및 차기 권력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

전국단위 패널조사는 선거 전후 2회를 실시하여 지난 대선 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와 현 정부 후반기 집권전략, 2012년 권력재편에 미칠 파장을 집중 탐색한다. 전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2007년 대선패널, 2008년 총선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200명 규모의 패널을 구성하여 이전 선거 이후 유권자 태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0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첫 조사로서 전국단위 패널1차 조사결과를 담았다.

제1차 전국 패널조사

조사일시	5월 4일~6일(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무작위추출 가정 95%신뢰수준 $\pm 2.8\%$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패널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내영 (연구팀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강원택(송실대), 권혁용(고려대), 김성태(고려대), 김민전(경희대), 서현진(성신여대), 유성진(이화여대), 이우진(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시립대), 지병근(조선대), 서상민(EAI), 이곤수(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언론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조사연구팀

김춘석(한국리서치 수석연구부장), 임석빈 (한국리서치 과장)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